3월 실업급여 6,400억… 역대 최대 또 경신

실업자 130만… 고용 개선 '난망'
고용보험 가입 7년만에 최대 증가
정부, 결국 추경으로 '돌려막기'



지난해 겨울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구인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총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사진=시장경제DB

역대 최고의 실업률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6397억원을 기록,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수는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음식·숙박,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은 9년4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인식 개선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며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가 5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명(11.0%)이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202억원(23.1%)이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올 1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던 6256억원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총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2017년(134만4000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이다. 지난해보다 52만6000명(4.1%) 늘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53만3000명 이후 7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서비스업의 3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9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명이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 52만1000명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도 피보험자 수가 357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0.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의약품의 증가 폭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와 섬유제품은 감소세가 지속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오르고,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정하는 하한 지급액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덩달아 오른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늘어난 수급자가 지난달까지 자신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돌려 말하면 지난해 4분기 이후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서는 6조원~8조원 사이에서 추경이 꾸려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18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임정환 기자 eruca@meconomynews.com



재해예방 '배선 지중화' 예산 지속 축소

文정부들어 600억 줄어
한전, 김종훈 의원실에 자료



최근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화재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긴급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시장경제DB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배선 지중화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이 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예산 축소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 배전 지중화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할 조립주택을 서둘러 제공하기로 했다. 도심에 잠시 머물길 원하는 가구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택 복구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준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 대출·보증 상환 유예와 신규 자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전기·가스요금과 통신비 경감 등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난 폐기물은 전액 국고로 처리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 관련 국가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미비점은 개선해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244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

경기둔화·통화정책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8일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올해 세 번째 동결 결정이다.

이번 동결도 시장의 예상대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간담회에서 "전문기관이나 시장에서 금리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기준금리 동결의 주된 요인은 국내 경제지표 흐름이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연내 금리 동결을 시사한 점, 주요국 성장 둔화와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된 것도 동결에 힘을 실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2.25~2.50%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0.75%포인트 벌어져 있다.

한은은 지난달 열린 금융안정회의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부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 부채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돈을 빌려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한편 주요 기관과 한국은행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도 성장률 하향을 막지 못하고 하반기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전망(2.5%)보다 낮은 2.3%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이 예측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성장률을 지난해 11월(2.8%)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기존 전망에서 0.1%포인트 내린 2.5%로 제시했다.

윤희원 기자 ieyoon@meconomynews.com